제2주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과제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개발팀장)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전략과 과제

Ⅰ. 문제의 제기

○ 최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국가 정책적인 의제로서 회자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 근본적 공통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생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주민이 나선다는 마을 만들기 고유의 정신이다.

- 그러나 근본적 차이점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가 대체로 다수의 주체에 의해 ‘좋은 생활환경 가꾸기’라는 비교적 공통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는 데 반해서,[1]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는 대체로 주체가 매우 부족하고 좋은 생활환경보다는 경제적인 소득 높이기가 우선되고 공통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우리 농촌의 주체 부족, 소득의 상대적 저하 문제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의제가 회자되기 시작한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잠복해 있다.

- 국가 전체적으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지향, 시민사회의 성숙과 생활문화의 선진화 지향,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 구체화 등과 같은 사회발전의 단계 진전

- 농촌 측면에서는 농촌정책의 지평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언명. 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과 동격의 의미였던 농촌정책에서 다양한 성격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터전으로서 농촌을 가꾸는 내용의 농촌정책으로의 이행

1) 도시에서의 좋은 생활환경 가꾸기는 도시민들에게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경제 가치를 높이는 수단일수도 하다.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의제의 발단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적 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등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로 이원화되어 접근[2)]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는 농림부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는 건교부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행자부가 하는 식으로 주무부처 설정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체로 정책적으로는 기존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환의 대책을 통해 추구하여 왔던 농촌정책에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을 통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왔다.

○ 이 글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실천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선, 우리 농촌은 살기좋은 곳인가를 생각하여 보고, 둘째,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정책적 논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며, 셋째,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여러 가지 현장의 시도 속에서 공통된 특징을 파악한 후, 끝으로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대한 행동 전략과 과제들에 대하여 고려해 보기로 한다.

-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군의 정책을 연계하고 조율하는 도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할 쟁점을 안고 있다.

---

2) 살기좋은 도시, 살기좋은 농촌, 살기좋은 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지역은 여러 공간을 통칭하는 의미이면서 도시, 농촌, 섬 등과 같이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II. 우리 농촌은 살기좋은 곳인가

○ 우리 농촌은 살기좋은 곳인가. '살기좋다'는 것의 이미지나 정의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이 존재할 수는 없다.

-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여 고용기회가 많고 일하기 좋은 곳
- 자랑할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품격있는 공동체 문화가 어우러진 곳
- 생활환경이 충실하여 생활이 편리한 곳

※ 기준이나 정도는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탓에 고정적인 개념을 못 박아 두는 일은 불필요

○ 농촌은 살기좋은 곳[3] (긍정적)

- 상대적으로 쾌적한 자연생태환경과 경관
-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와 주택 가격
-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
- 상대적으로 친밀한 이웃 관계 등

○ 농촌은 살기좋지 않은 곳 (부정적)

-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경제와 부족한 고용기회 (먹고 살기 어려운 곳)
- 상대적으로 낙후한 기초 생활 시설 및 서비스의 질 (생활이 불편한 곳)

3) ... 농촌지역은 농업 종사자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농촌 거주자들가 밀접히 연관되어야만 한다. 또한 농촌개발은 환경과 경관의 보호라는 측면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도 안 된다. 일자리나 소득지표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로 낮은 일인당 소득, 높은 실업률 등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하여 부족함을 가지고 농촌지역을 기술하는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정의들은 농촌지역에 대한 부정적 정의를 할뿐이다. 그 대신에 농촌지역의 부족함보다는 개발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 정의가 더욱 적합할 것이다(Gunter Kroes, 2001).

-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활력 저하 (아기울음소리 나지 않는 곳) 등

  · 2005년 현재 전국 인구 중 농촌인구는 18.5%로 감소

  · 200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동은 5.5%, 읍은 9.6%, 면은 18.1%

III.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정책적 흐름과 현황

1. 농촌 만들기 정책의 전개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1958년도에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CD program)'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UN과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dministration)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채택했던 모델이다(정기환, 2002).

- 지역 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정비하며, 지역의 개발수요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지닌 자원이 부족할 때 정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회 운동적 성격을 보였다.

○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60년대에 들어와 '시범농촌건설사업'으로 발전했다. 지리, 사회, 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여러 개 마을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설정한 농촌진흥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농사기술 개량 및 주민 조직화, 교량 건설, 소하천 정리, 도로·농로 개발, 저수지 축조, 보건위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농, 농·공간 격차가 확대되고 이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로 대두된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농촌정책을 대표한다(송미령, 2006b).

○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바탕이 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기본이념이 대통령에 의해 제기되고, '시·도-시·군-읍·면-행정리'로 이어지는 지방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행자부(구 내무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 사업의 촉발은 중앙정부에서 비롯되었으나 새마을운동의 각 행정리별 사업은 주민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는 새마을 운동의 목적 및 기조와 무관치 않았는데, 새마을 운동은 주민의 정신혁명을 촉진하여 도·농간 소득균형을 달성하되 주민의 노력에 의한 사업의 조직화와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4)]

○ 그러나 새마을 운동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동원된 참여'로 그치고 말았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그 구심점이 무너지자 운동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김홍순, 2000).

○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기원하여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한 1970년대까지의 농촌개발은 위로부터 촉발된 사업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생산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물리적 개발 이상으로 주민조직과 지도자 육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정기환, 2002).

○ 1980·90년대는 농촌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급변한 시기이다(정기환, 2002; 송미령, 2006). 1980년대는 한국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 주민들의 정주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개발의 범위가 마을에서 농촌 중심도시를 포함하는 군 단위로 확대되었다.

---

4) 가령 마을의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3만 3,000여 개 마을에 시멘트와 철근이 지급되고, 마을개발위원회 주도로 주민들의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도로, 교량 정비 등 각 마을에 절실한 사업을 추진했다.

- 개발 과제도 마을 단위 인프라 개발과 소득활동을 뛰어 넘어 군 중심도시의 개발과 배후 농촌 마을의 연계 개발, 정주생활권 내 주민들의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의 진흥,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군 단위 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개선을 포함하게 되었다.

○ 1990년대에는 1980년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농어촌발전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지원으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이 추진되었다.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을 계기로 이른바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 원의 농특세사업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투융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농촌개발사업 예산도 대폭 늘었다.

- 예산과 사업 추진 근거 법률이 뒷받침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본격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특히 마을 단위의 주택, 도로, 농로, 상하수도 등 마을의 물적 기반 조성과 정비에 역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었다.

○ 전체적으로 보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개발사업에서는 물량 위주의 성과를 내는 데 역점을 두게 되었고, 주민조직이나 지도자 육성 등 사람을 키우는 일은 소홀히 했다고 평가된다.

○ 2000년대에 들어서면 10여 개 이상의 중앙정부 부처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농촌의 하드웨어 정비, 기초 서비스 향상, 도농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요약하자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농촌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수준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대부분 농촌지역에 도로가 정비되어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택의 절대적 낙후 수준도 크게 개선됐다. 또한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마을의 수가 300개를 훌쩍 넘어섰다.

<표 1>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연대별 변천과 주요 내용

구 분	연 대	주요 내용	추진 주체	개발 방식
지역개발 사업	1950 ~ 1960	- 주민 조직화 - 지도력 배양 - 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지도원, 주민	상향식 개발
농촌 새마을운동	1970	- 새마을지도자 육성 - 주민 조직화 - 생활환경 개선 - 자원 조성과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정부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과 혼합형)
농촌지역 종합개발	1980	- 도·농통합 개발 - 중심도시 육성 - 배후마을 개발 - 지역산업 개발 -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개발 - 환경 개발	지자체, 주민	주민의사 수렴
정주생활권 개발	1990	- 중심마을 개발 - 주택 및 도로 개발 - 상하수도 개발 - 환경개발 - 마을 공공 및 편의시설 개발	지자체, 주민 대행기관	주민의사 수렴

자료: 정기환(2002)

○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농촌정책에 대해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송미령, 2006), 첫째로, 지나치게 하드웨어 정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농촌개발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실적 파악에 용이한 물량 위주의 사업에 무게중심이 놓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촌의 환경관리, 소득개발, 인재교육 등과 괴리된 채 하드웨어적 개발사업이 농촌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됐다.

○ 둘째로, 사업 추진 방식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행정이 고착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주민역량이 약화됐다.

- 195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농촌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을 정책화하고, 지방에 지침을 내려 주어 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 지방의 창의와 특성 등은 발휘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지방은 그저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 셋째로, 주민 역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의 수혜자일 뿐 그 기획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다보니 전국 어디를 가나 일률적, 획일적, 표준화된 모습이 농촌을 도배하게 되었고, 하드웨어의 정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소프트웨어가 빈곤한 모양새를 보이게 됐다.

2. 참여정부의 농촌정책: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 참여정부 들어서는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의 목표로 내걸었으며, 농촌정책에서도 이전에 비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권한의 지방이양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농촌개발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대행하는 손발 역할에 머물렀다는 문제의식이 그 바탕이 되었다.

- 그래서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본격 재편되기도 하였다.

-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예산운용 시스템이 형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던 농촌개발사업의 대다수가 균특회계사업으로 이전되었다. 균특회계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주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부처별로 시행되는 분절적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 및 복지·교육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협조 및 조정 체제를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과 관련 시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 낙후지역의 혁신 유도를 위해 일방적인 사업성 재원 확대보다는 분산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로 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모색코자 신활력사업을 신설하였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개발에서 지역의 자율성, 소프트한 분야에의 강조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 최근에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면서 기존의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송미령, 2006a).

- 복합생활공간이란 농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을 '부족한 인구' 문제로 보고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농어촌에 유치하고 혹은 전 국민을 상대로 농어촌 정주에 대한 의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통칭.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물리적 정주공간 조성, 이주단계별 정주 지원, 농촌정책의 추진체계 재편 등의 정책 묶음으로 구성

<복합생활공간의 개념>

◆ 광의의 복합생활공간

○ 농어촌 주민과 도시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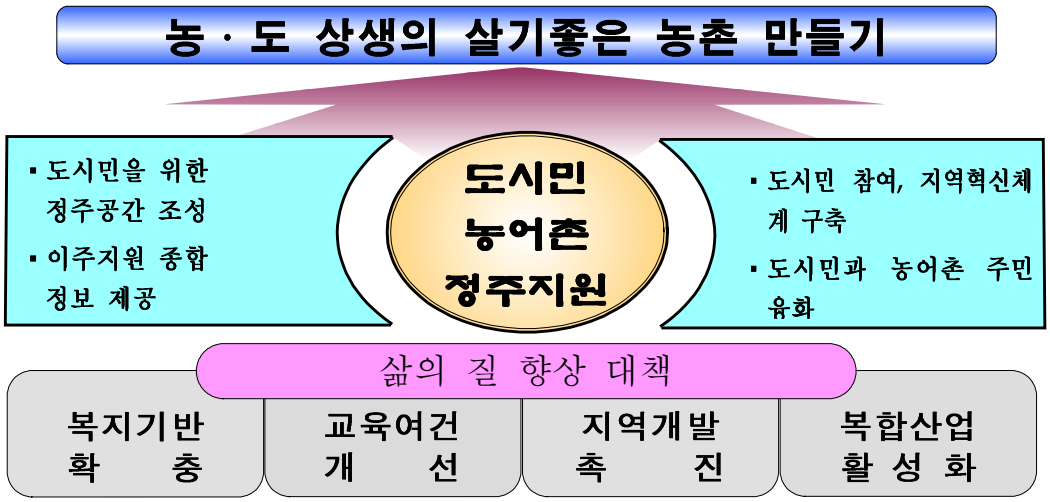
○ 생활, 생산, 휴양 등 다양한 목적의 정주가 이루어지는 곳

○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되는 곳

⇒ 농어촌의 장소적 효용(place utility) 증대

◆ 협의의 복합생활공간

○ 전통과 숲이 있는 '마을'로서 기초 생활환경시설과 교육·복지·문화서비스가 충실하며, 이주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공간



〔그림 1〕 참여정부의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전략

○ 이처럼 권한의 지방이양과 농촌 등 낙후지역 발전을 내건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 (지방의 역량 측면) 여러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역량 형성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업도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많다. 주민참여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 (농촌정책의 측면) 삶의질위원회의 농촌정책 조정 기능이 그리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 단위에서도 삶의질 시행계획 수립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 (국토정책의 측면)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으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도시개발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이 주조를 이루는 모습마저 보이면서 신개발주의(강홍빈, 2004)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했다. 이러한 도시개발 위주 정책 기조에서 농촌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주민이 참여하는 더 나은 생활공간을 만든다는 지향점이 같으나 주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에 근접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을 우선하여 배려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방향

3. 각 도별 특화 농촌정책의 대두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 1999년 출발
- 정신, 소득, 환경 개조의 원칙
- 18개 시·군 중 15개 마을 선발, 5억 원의 포괄 지원
- 중앙정부 정책 재편의 모델

○ 전남도의 행복마을 만들기

- 2006년 논의중
- 인구 감소, 소멸할 농촌 마을에 대한 고민과 미래 농촌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 전북도의 농촌발전기획단 운영 시도

- 2006년 논의중
- 전북 장수군의 농촌발전기획단 모델

4.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지역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켜 풍요롭고 매력있는 지역으로 변환시키자는 접근

- 지역주도, 주민주도의 대원칙 강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목표는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로 구체화

-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과제로서 고품격 생활공간,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 제고,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을 제시

○ 진행 방식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지역-지자체-중앙정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기획, 지역자산 조사, 지역자원 활용 등을 주민참여로 추진

○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 특히 행정자치부는 건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에 추진하는 주관부처별 중앙기획 공모전과 병행하여 '9개+알파'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우수계획을 선정, 사업을 추진

- 알파형이란 9개 유형을 조합하여 개발한 제3의 유형이거나 새롭게 개발한 유형

○ 사업 추진 방식은 기본 모델을 샘플로 하여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 공모에 도전하여 우수계획 30여 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지원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

- 우수계획 선정의 기준은 합당한 모델의 선택 및 사업기획,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및 의지 등

<표 2>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사업 모델

기본모델	특 성	특화형 예시
산업형	생산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테마	- 향토산업형, 첨단산업형
교육형	교육활동이 발전의 주요 테마	- 국제화형, 한국전통형
정보형	지역의 풍부한 정보인프라 활용	- 정보화마을형, U-city형
생태형	양질의 환경, 생태가 주요 테마	-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전통형	전통, 역사유물, 유적이 테마	- 고도형, 설화민담형
문화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 예술인촌형, 축제형
관광형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 자연관광형, 예술관광형
건강형	스포츠시설 등을 통한 심신 단련	- 스포츠형, 휴양형
가족형	New Urbanism, 가족공동체 테마	- 3세대형, 유아여성편의형

Ⅳ.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현장의 도전

1. 사례의 유형

1)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도

가. 보성군

○ 1970년대 말 ~ 1980년대 초: 국내 홍차 시장 상황과 지역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 소수의 보성군 내 차 재배 농업인들과 홍차 가공 경영체 경영주들은 1980년대 들어 진행된 홍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위기를 공감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녹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 1980년대 초반: 녹차 상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노력

- 녹차 가공 기술을 정립하여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목표 하에 비공식적인 '학습 모임'이 형성되었다. 각 농가에서 수확한 녹차 생엽을 모아 덖음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공동으로 시음하고 평가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역 외부로부터 녹차 가공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승려 등을 초빙하여 녹차 가공에 관해 배우기도 했으며, 사비를 모아 일본 등 선진 가공기술을 갖춘 외국을 견학하기도 했다. 그 결과, 녹차 가공기술을 정립할 수 있었다.

○ 1980년대 중반: 최초의 보성 녹차 관련 협력조직 출현

- 녹차 가공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농업인과 승려, 그리고 소비자들이 녹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를 결성했다. 이 조직은 녹차를 테마로 한 지역축제인 다향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보성군의 차 재배 농업인과 가공 경영체 경영주들의 친목회인 '다농회'가 결성되었다.

○ 2000년: 지리적 표시제 도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습

- 보성군청과 녹차 가공 경영체들은 농림부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성 녹차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 2001년: '보성 녹차 생산자 협의회' 결성, 녹차 생산자와 공공부문의 협력활동 시작

-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주체로서 보성 녹차 생산자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협의회, 보성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 녹차시험장 등 네 주체들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했다.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했으며, 부정기적으로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련 공무원들이 동석하여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했다.

○ 2001년: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결성, 지리적표시 등록

- 녹차 가공 경영체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결성되고, 이 연합회는 지리적표시를 등록했다.

○ 2002년: 보성녹차연합회 소속 경영체 지리적표시 상품 품질규약 제정

- 지리적표시 등록 업체들의 모임인 보성녹차연합회는 우전, 곡우, 세작의 세 종류 상품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으로 품질관리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보성 녹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 2003년: 보성 녹차 재배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 국내 녹차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급증하고 수입량도 늘어가는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보성 녹차의 차별화를 위해 보성녹차생산자협의회 내 유기농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재배를 시도했다. 효율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재배기술이 시도되고, 정착되었다.

○ 2004년: 보성군 신활력사업추진단 조직, 지역혁신협의회 창립, 보성녹차생산자 협의회를 매개로 원료 녹차 수매가격 결정 메커니즘 출현

- 보성녹차생산자 협의회 내 녹차 재배 농업인들과 가공 경영체들 간의 집단적인 원료 수매가격 협상 관례가 시작되었다.

나. 함양군

○ 2003년 군수의 동기부여로 '함양군 100+100 혁신 운동'이 시작

- 100+100 혁신 운동은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100호 이상,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를 100명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것이다.

- 연간 50회 주민들 수 백 명을 대상으로 의식고양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지역의 젊은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품목별 연구회 결성(예: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

- 기존의 형식적인 학습 단체와는 달리 철저하게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조직'들이 등장했다(쌀, 사과, 파프리카, 딸기 연구회).

○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농업기술 학습

- 매월 1회, 회원들의 영농경험을 교환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농기술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 외에도 지역 외의 전문적인 시험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했다.

○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외의 대학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진주 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함양군으로 유치하여 '사과' 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학습과정을 운용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과정의 강사진과 커리큘럼을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학습(돈 되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는 덤이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과 재배 농업인이 2003년 3명에서 2005년 25명으로 증가하자 이런 방식의 학습 과정이 파프리카나 딸기에도 확대되어 조직되었다. 사과 학습 과정은 대상을 달리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사과 연구회 회원들은 자신이 속한 출하조직(품목조합)의 품질관리를 위해 '표준영농매뉴얼'을 스스로 제작. 표준영농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공동선별, 공동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 청과물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 확대

- 대형 할인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균일한 품질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재배면적 확대, 품질 등급화, 공동정산제 등이 주요 목표이다.

<참고> 주민들의 자기주도 학습 사례: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의 경우

○ 함양군의 선도적인 연구모임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이다. 비교적 젊은 40-50대 연령층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회원 스스로의 주도에 의해 학습을 이끌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3년 전 관행적인 농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하고자 시도하던 몇몇 젊은 사과 농업인들은 함양군의 100+100 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에 참여하고 군의군의 사과시험장 등을 견학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이들은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 연구회는 학습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서로의 농장을 방문하여 사과 재배 상황을 함께 관찰하며 영농기술을 주고받는 현장토론, 정례적으로 모여서 토론하는 세미나, 관련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하는 견학 등이 이들의 주된 학습활동이었다.[5)]

○ 나아가 이들은 지방 농과대학(진주산업대학교)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대학 측과 협의하여 지역에 개설토록 하였다. 단순히 수료증만 취득하는 데 목적을 둔 과정이 아니라 사과 농사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사과에 관한 것만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편성과 강사 선정 등을 학습자들이 주도하였다. 배워야 할 내용과 적합한 강사를 정해서 세부적인 섭외 등을 대학교 측에 의뢰한 것이다.[6)]

○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함양군에서 1년에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2003년에 세 농가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2005년 말에는 20호로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사과 연구회 소속 농가이다.

---

5) 이들은 대학에서 연구된 7회 방제력(1년 중 최소한의 농약 살포회수를 7회로 규정해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병충해 방제를 위해 어떤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지 정리한 일종의 달력)을 도입하면서 함양군의 기상 조건이나 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응용된 방제력을 개발하기도 했다.

6) 함양군에서도 이들을 위해 1년 수강료(25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은 50만 원만 자부담하도록 하였다.

다. 장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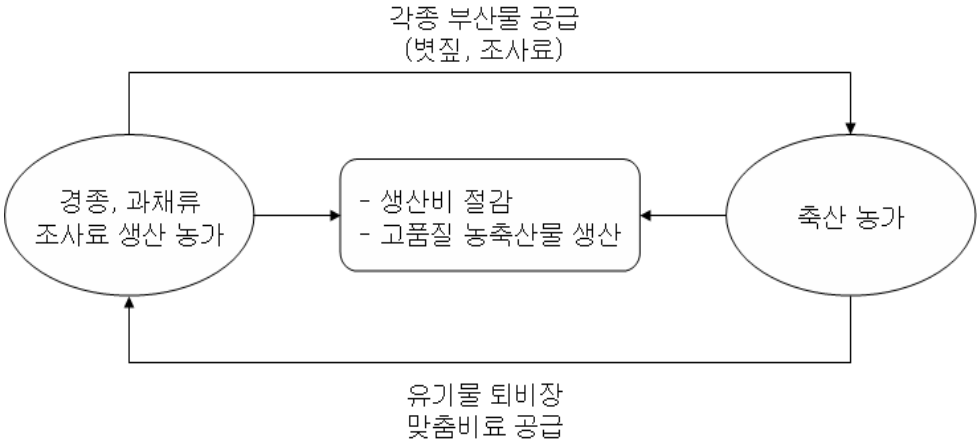
○ 군수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출범한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은 군 농업소득과에 속해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군의 농촌발전전략 마련과 새로운 시책 개발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그러한 중책을 맡긴 것도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진행 틀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이러한 별도 기획 조직은 부서간에 가로놓일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 지역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농촌발전기획단이 발족해서 처음 수행한 작업은 치밀한 지역 실태 조사였다. 장수군 관내 6천3백여 농가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작목, 자산, 부채 현황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였다. 그것이 향후 장수군 농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 그렇게 해서 '장수군 차별화시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여기에서 지역순환농업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 지역순환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땅과 작물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비료를 사용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우 사육 농가는 경종, 과수, 원예 농가 등에 축분을 맞춤비료로 공급하고 반대로 경종, 과수 등의 농가는 조사료나 각종 부산물을 축산 농가에 공급토록 한다. 한마디로 좋은 퇴비를 원하는 경종·과수 농가들과 양질의 조사료를 원하는 한우 사육 농가들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시켜주는 것이다.



〔그림 2〕 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 개념

○ 최근 2-3년 동안 장수군은 지역순환농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굵직한 정책사업을 대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 한우 신활력사업(행자부), 사과클러스터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사업, FTA과수지원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상 농림부), 가축분뇨자원화 통합관리센터 사업(환경부) 등이 그것이다.[7]

-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순환농업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충실한 로드맵을 마련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될 만한 곳을 지원해준다는 선택과 집중의 중앙정부 농정기조를 읽어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지역순환농업이라는 비전이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자면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8] 그래서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이끌어내는 구심으로서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이 구성되었다.

---

7) 이는 총 1천6백억 원을 넘는 액수로 규모가 작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일 년 예산액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8) 부채농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경영회생제도 역시 지역순환농업으로의 재편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장수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외부 인재 유치도 지역순환농업 이념에 함께 할 수 있는 귀농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귀농 가구 거주지인 장수 하늘소마을이 그런 경우이다. 장수권의 경영회생제도에 대해서는 정천섭(2006)을 참고할 수 있다.

-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지역 단위에서 여러 관련 주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장수군이 유치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조직된 전담기구이다.

-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순환농업 관련 사업단들로 구성되며, 이들을 통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 행정자치부의 신활력사업인 '장수한우 브랜드파워 클러스터 구축사업'(2004년)을 담당하는 한우사업단

  · 농림부의 'Mt. Apple 클러스터 구축 사업'(2005년)을 추진하는 사과사업단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팀 등

○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은 관 주도의 기존 정부 지원사업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 부문의 창의력을 활용하고자 주민과 지역의 농업 관련 단체 구성원과 민간 부문 전문가 등을 대거 끌어들여 구성하였다.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간 인력은 한우사업단 18명, 사과사업단 15명을 비롯해 총 37명이다. 공무원은 5명이며 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이처럼 장수군 모델은 주민, 전문가 등을 군정의 동반자로 삼고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 총괄 기획 기능을 담당하여 지역 비전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농촌발전기획단의 역할을 장수군 사례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과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어 구성한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활동 등도 중요하다.

○ 이제 장수군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농업의 경우는 5+3 운동으로 재도약. 소득 5천만원 이상 올리는 농가를 3천 농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 농업에서 나아가 지역 전체의 문화와 복지 시스템을 스스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발전기획단 보강

2)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

가. 토고미

○ 토고미(土雇米) 마을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위치한다. 화천군은 서울에서 3시간이 걸리며 휴전선으로부터 30㎞ 남쪽에 위치한 접경 오지지역이다. 약 80호가 거주하며 벼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촌마을, 토고미는 이제 한국 농촌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연간 1만 명의 도시민이 마을을 방문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한 사례이다.

<표 3> 토고미의 일반 현황

가 구(호)			인 구(명)			농경지(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전	답
82	58	24	398	214	184	88	35	53

○ 마을 출신으로 농협에 근무하다 위암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귀농한 한상열씨(토고미 나눔의 농사가족 가장)가 1999년 마을 주민 3명과 '토고미 환경농업작목반'을 구성하여 1ha의 농지에 무농약 오리쌀 재배를 시작하였다. 경작지 조건이 오리농법에 적합하고 오리농법 쌀농사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차츰 면적이 확대되었다.

○ 토고미 마을에서는 오리쌀의 효과적 판매를 위하여 '나눔의 농사가족', 즉 도시민 가족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나눔의 농사가족'이란 도시민 가족회원이 연간 3만5천 원을 내면(새끼오리 15마리에 해당) 추석에 무공해 오리쌀 한 말을 보내주고 농산물 구입시 15% 할인 및 숙박시설 이용시 30% 할인 혜택을 주는 전략이다.

○ 2001년도에 강원도의 정책 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의 우수마을 선정을 계기로 화천군과 토고미 마을 주민들은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마을 내 폐가를 전통가옥으로 보수하여 농기구박물관을 조성하고, 기존 마을회관을 도시민의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로 보수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 2002년에는 폐교(임대)를 리모델링하여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때 2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지만, 토고미 오리쌀 전용 마을정미소를 설치하여 보다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 2003년에는 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카드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마을 공동 펜션을 조성하였다. 또한 토고미 자연학교 및 마을 농촌관광을 담당할 사무국장을 주민 중에서 고용하였고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임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 때에는 마을이 알려지면서 오리쌀의 판매도 증가하고 단체 체험객이 많아져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에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2004년에는 2천만 원의 연봉계약을 맺고 마을 사무국장 상근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오리쌀의 자체 등급제(특등, 1등, 2등)를 시행함으로써 자율적 품질 관리를 단행하였다.[9] 오리쌀의 택배 전용 포장제(20kg)도 자체 개발하고 200평 규모의 마을공원도 조성하였다.

9) 등급 당 가격편차는 정곡 80kg를 기준으로 9,000원이다.

○ 그밖에 지속적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오리입식대회, 소달구지 타기, 새끼 꼬기, 가마니 치기, 떡 만들기, 꼬뚜레 만들기 등 다종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 2001년 모집 당시 150호이던 토고미 마을의 도시민 가족회원은 2005년 1월 현재 약 1,100호이다. 주민들은 매달 영농일기를 도시민 회원들에게 보내 주어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구체화하고 있다.

○ 농산물 판매를 보다 강화하고 마을의 매력을 증대하기 위해 최근에는 토고미 자연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및 직장인 등 단체 방문자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 실행중이다. 나아가 마을 경관 가꾸기 및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이웃 마을과의 연대 및 기업과의 교류를 구상 중이다.

○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가구별 소득도 대폭 증대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화천군에는 유사한 마을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나. 부래미

○ 부래미 마을은 총 28가구 7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28가구 중 농가는 22호이고 총 경지면적은 60.3ha이며 특히 논이 29ha를 차지하는 벼농사 중심의 고령화된 마을이다.[10] 그러나 최근 농촌다움과 문화를 결합한 농촌관광의 모범적 마을로 부각되고 있다.

- 도시민이 농촌에서 체험할 거리를 개발,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쌀, 배, 포도 등 지역 농산물에도 부래미라는 브랜드를 입혀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라고 평가된다.

10) 호당 경지면적은 2.7ha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논이 29ha, 밭이 26ha, 배 및 복숭아 등 과수원이 5.3ha를 차지한다. 농가의 소득은 쌀, 배, 복숭아로서 조수입 기준으로 각각 80%, 10%, 10%를 차지해 벼농사 중심의 마을이라 할 수 있다.

○ 전형적인 벼농사 중심의 농촌 마을로서 수도권에는 속해 있지만 개발행위의 파급이 미치지 않았던 다소 낙후된 곳이었다. 그러나 2001년, 2002년 즈음 농업을 둘러싼 상황은 향후 농업, 농촌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불안한 문제 인식을 가지게 했으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마을 지도자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출향 인사 내외의 자극과 적극적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11)]

- 먼저 부래미의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무엇보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집행 구조를 갖추어 소수에게만 역할이 집중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2002년 처음 3개월 동안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농촌관광의 선진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국내 여러 마을에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 단합과 의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귀농한 도시민과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볼품없던 영농창고 외벽을 미술작품으로 변화시키고 마을안내판도 정비하는 것을 계기로 마을 가꾸기, 도농교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 처음에는 마을 청소, 꽃심기 같은 쉬운 일부터 실행하였지만, 귀농한 화가와의 공동 작업으로 점차 다양한 환경정비까지 하게 되었다.

- 농업, 농촌이 약간의 문화적 작업과 더해짐으로써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 2003년 1월에는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원금 2억 원과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시상금 등으로 마을 어귀에 대지 100평 규모의 '녹색체험장(green school)'

11) '앞으로는 벼농사를 하여도 정부 수매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원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출향인사인 이상용 당시 중앙부처 국장과 그의 부인인 고경필씨가 마을 주민들을 도와 적극적으로 선도하였다. 이밖에도 이들의 매개를 통해 컨설팅업체, 연구자, 각 기관단체 등이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가마다 복숭아와 강낭콩, 배 등 체험농장을 마련하고, 농가 4호는 민박을 운영키로 역할도 분담하였다. 농업용수용 저수지를 낚시터로도 활용 가능토록 정비하였으며, 방치해뒀던 옛 농기구 등을 모아 작은 박물관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 2002년 12월에 '녹색, 문화, 관광'이라는 세 가지 테마를 내세워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던 것이 오늘날 부래미마을을 탄생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 녹색체험장 만들기

- 100여 평의 부지에 통나무로 지어진 녹색체험장, 그린스쿨은 2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이 작은 마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식당, 샤워시설, 화장실, 정보화실이 갖추어진 실내 공간과 족구장 정도로 쓰일법한 다용도 실외 공간이지만 주민들에게도 방문자들에게도 유용한 장소이다.

- 그린스쿨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이자 체험행사가 열리는 중심공간이면서 마을 농가가 운영하는 쌀농장, 배농장, 사슴목장 등 테마농가들과의 교차점 역할을 한다.

- 2003년 6월 (주)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사업에 선정되고, 2003년 11월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을 통해 받은 사업비는 그야말로 종자돈(seed money)으로서의 역할을 해 냈으며,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해보자 결심하고 있을 때 주어진 값진 지원이었고, 녹색체험장은 그 결실이었다.

-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함께 외벽을 장식한 영농창고가 있다.

○ 2004년 봄에는 '농촌풍경그리기 부래미마을 미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그 해 여름부터는 포도주 담그기 및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일명 포도체험캠프 운영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 일반 프로그램: 농사체험, 전통문화체험, 놀이체험, 자연생태체험, 먹거리체험

- 이벤트 프로그램: 홈커밍데이(정월 대보름경), 부래미 배꽃축제(4월경), 포도체험캠프(8-9월경), 부래미 미술대회(10월 하순경)

- 가을축제: 국화전시회, 사진컨테스트, 거북놀이, 미술대회 등

○ 2004년 정보화마을 사업을 계기로 한층 강력해진 마을 홈페이지(www.buraemi.com)를 통해서도 도농교류를 추진 중이다. 가령, '사이버 팜'을 통해 마을의 배나무와 쌀 등을 분양하고 인터넷으로 작물을 재배, 관리하도록 하며 가을철에는 분양자들이 직접 마을에 와서 수확하도록 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한다. '부래미 사랑모임' 코너를 통해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향우회소식 나누기, 애경사 연락 등 상호간 교류,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애향 활동을 전개한다.

○ 2005년에는 마을의 늘어난 살림살이를 돌보아줄 젊은 새 가족으로 마을 사무장이 새로 이사해왔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 사무장을 대학원에 진학시켜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 또한 2005년에는 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구성된 '슬로우푸드(slow food) 사업단'과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할머니 사업단'이 발족하였다. 이 사업단에서는 반찬류와 김치 등 공동식당에서 소용되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나아가 일반 도시민에게도 판매한다.

○ 2006년, 부래미 마을은 마을을 넘어 이웃한 마을들과 협력하고, 나누고, 상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론하고 학습하는 공부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출향인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단된다 하여도 지역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처음 공부모임은 2004년 3월에 16명으로 발족한 이래, 지금은 60여명이 참여하여 매월 마지막 목요일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 공식적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마을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마을 지도자는 2002년 무렵 처음 마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1년에 마을주민 회의만 100회는 개최하였다고 기억한다.

○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과 홍보 관련 종사자를 포함하여 주도적으로는 6명이 마을 일을 이끌어 가고 있다.

- 이장(상머슴): 마을업무 총괄
- 총무(안머슴): 기획, 운영 및 재무회계
- 부녀회장(이상궁): 공동식당 관리, 단체식사
- 마당쇠: 홍보,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원
- 벌(판)머슴: 섭회, 지도, 고객관리
- 사무장: 사무행정, 프로그램 진행 등

3)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

가. 금산군

○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지자체로 이어지는 각각의 행정계통을 따라 사업이 분산 추진되므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사업들의 연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충남 금산군의 다락원(多樂苑)건립 과정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제약이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실증한다.

○ 금산군 다락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들을 하나의 대규모 시설에 집중시킨 것이다.

- 부지 면적 1만970평에 건축 면적 2천 평 규모의 건물로 생명의 집(문예회관),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평생학습센터),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등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금산군은 다락원을 '복합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라고 소개하고 있다.

- 2000년 말부터 다락원 공사를 시작해서 3년 반만에 준공한 이 시설의 건축 비용은 약 256억 원에 이른다.

○ 금산군은 여러 중앙정부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로부터의 보조금 사업들과 금산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합하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였다.

-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행정자치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기관의 지원금이 다락원 건립에 이용되었다.

<표 4> 다락원 건립에 투입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보조금 사업 내역

구 분		보조금 사업명
중앙정부부처	문화관광부	* 문예회관 건립 * 문화원 건립 * 야외공연장 건립
	보건복지부	* 보건소 건립 * 노인복지회관 건립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농림부	*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농촌진흥청	*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건립
	행정자치부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정부출연기관	마사회	*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센터 건립

자료: 금산 다락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ragwon.net/)

〔그림 3〕 금산 다락원 전경

○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산군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이 되어 금산군청에는 '다락원 건립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이 조직되었다. 여기에 군청 내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다락원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부처의 여러 보조금을 획득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 다락원 건립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앙부처로부터는 예산을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12)]

-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사업비를 통합하여 하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각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고, 감사를 받을 경우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락원 건립이 쉽지 않았다.

○ 이러한 어려움 끝에 건립된 다락원은 지역 주민들의 구심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매우 큰 시설임에도 현재 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아 운영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이다.

12)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이 자금을 보조하는 '농촌 여성 생활과학관' 건립 사업의 경우이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사업비로 '생활과학관'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락원 내 '여성의 집'이라는 부속 건물 건축 비용의 일부로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다락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효과도 낳는다.

- 시설이 입지한 금산읍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곳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다락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같은 이동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나. 안성시

○ 농어촌 생활환경 여건 중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협동조합 조직으로 이러한 문제에 직접 대응코자 하는 사례로서 안성시 의료생협의 경우를 주목할 만하다.

- 현재 전국적으로 9개의 지역의료생협이 활동을 벌이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 중 안성의료생협은 가장 앞서서 출범했고 활성화된 의료생협으로 꼽힌다. 또한 대체로 도시에 그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안성의료생협은 의료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에서 벌인 활동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안성의료생협은 2006년 현재 의료부에 농민의원과 농민한의원, 생협치과의원, 우리생협의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밖에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료활동 외에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 안성의료생협 발단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연세대 의대·치대·간호대 기독학생회에서 당시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청년회와 연계하여 가유리에 열었던 주말진료소가 모태이다. 그러나 주말진료소 활동 자체가 한계가 있으므로 안성에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1차 보건의료활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학교 동아리의 범위를 넘어 뜻을 함께 하는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안성진료회가 결성되었다.

○ 안성진료회에서는 1992년 의료인과 일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자본 출현을 하여 운영하는 안성한의원을 먼저 설립하였다. 그리고 미양면, 고삼면, 양성면 농민회 회원과 주민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안성공동의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1993년 결성되었다. 추진위에서는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내 병원" 설립을 위해 그 방식을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81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1994년 "안성농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생협이 설립되었다.

○ 농민의원 설립 이후 농민회 활동이 활발하였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조합원은 안성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조합원 수는 2006년 현재 약 2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 2001년 1월에는 생협치과가 개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안성3동 지역에 있던 연세가정의원을 인수하여 우리생협의원이 설립되었다.

- 2002년에는 가정간호사업소가 개소하여 방문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4년 6월부터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받아 재가간병사업단이 출범하여 중증 환자나 치매노인, 장애인, 독거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지역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밖에도 지역사회 건강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가꾸기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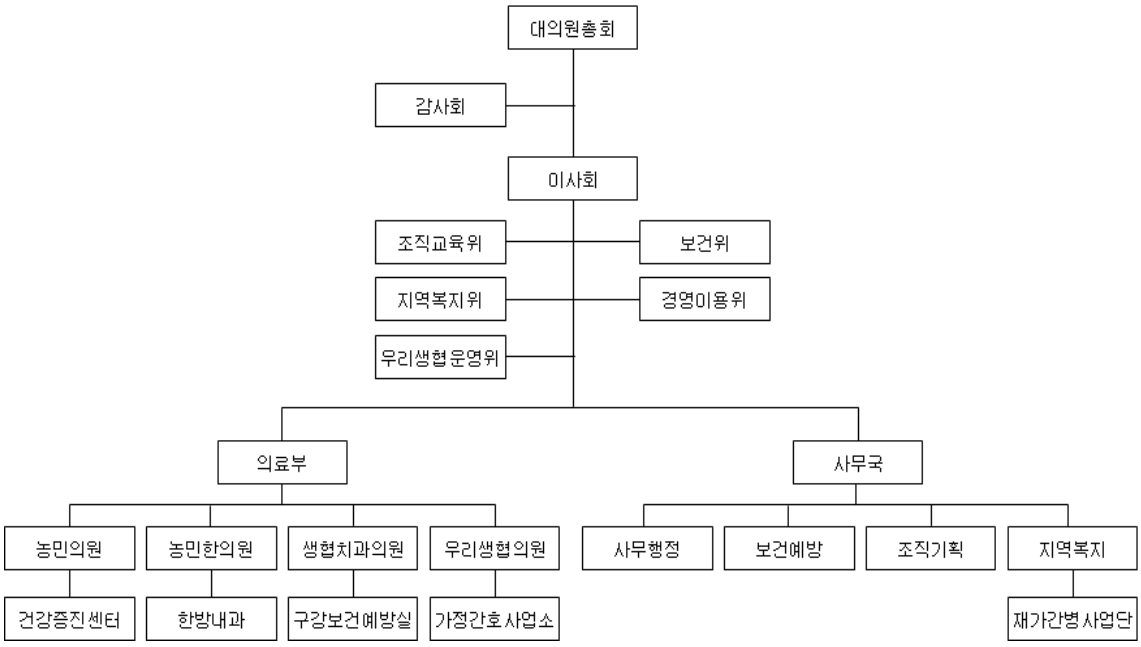
○ 의료생협은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조합원 활동이 그 근간을 이룬다. 조직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은 출자금 1구좌당 1만원, 1인 1투표 원칙으로 가입하며, 10구좌 가입에 대한 배당으로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진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지역별로 적정 인원이 배분된다.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 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벌이게 된다.

- 이사회에서는 조합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며, 조직교육위, 보건위, 지역복지위, 경영이용위, 우리생협운영위 등의 운영위원회는 조합원 교육과 각종 복지 관련 사업, 조합원 건강관리 활동, 지역사회 활동, 조합 경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실천활동을 펼쳐나간다.

- 사무국에서는 각종 실무 지원과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자료: 안성 의료생협 내부자료.

〔그림 4〕 안성의료생협 조직 구성도

○ 의료생협의 보건·의료 활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생협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의사들이 병원 수익보다 환자 진료에 매진토록 하므로 환자 중심의 의료활동이 더욱 용이해진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이 축적되므로 주민들로서도 주치의를 두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의료생협에서는 치료보다는 보건과 예방을 통한 건강 관리를 중시하여 보건위 활동과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가꾸기가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소모임 활동이나 건강마을 가꾸기 등의 지역사회 관련 활동들에 역점을 둔다.

- 한편 가정간호사업소에서는 만성적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재가간병사업단에서는 중증환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복지 사업으로도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 일찍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우리에 비해 의료생협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농어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어서 의료생협과 같이 보건·복지·의료를 연계한 서비스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특히 기존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생협과 같이 민간과 주민 자율적인 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사회적 기업과 연계시켜 그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는 논의도 늘고 있다.

- 지역 연고가 없던 의료인과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여 이루어온 안성의료생협의 모델은 농어촌에서 보람 있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료인력 및 도시민들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안성의료생협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력만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다. 안성시의 경우 농민회 활동이 지역에 탄탄히 자리잡고 오랜 기간 친환경농업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생협 활동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공통점

○ 엄격한 지역진단 과정

- 지역진단에 필요한 DB 구축
- 거친 수준의 자기진단에 따른 현안 발굴과 계획 수립
- 해당 지역에 적합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발굴
- 프로젝트 발굴의 계기는 어려운 여건

○ 비전의 제시

- 현안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

○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 과정

- 집합교육부터 크고작은 연구모임까지 다양한 교육, 훈련이 필수적으로 수반

○ 거창한 일이 아닌 작은 사업이 출발

○ 자극을 주고, 노력을 선도하는 리더

- 지자체 공무원, 외부 유입 주민 등

○ 도시와의 상호 관계

○ 새로운 프로젝트의 지속적 창출 및 목표의 구체화

- 지속가능성의 원천

V.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의 실천 전략 설정과 과제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대한 생각의 통합

- 누구에게 살기좋아야 하나?

  ⇒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살기좋은 곳이어야 한다.

- 도시민 유입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와 긍정적 관계가 있나?

  ⇒ 새로운 사람 유입이 없이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 어떤 것이 살기좋은 농촌인가?

  ⇒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초적인 컨테이너는 중앙정부가 공급한다. 그러나 컨텐트를 채우는 것은 지방의 몫이다.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통합성과 다양성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것과 정책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을 편의적으로 분할하여 부처별로 정책사업 확보 경쟁 양상이 재현되어서는 곤란하다.

- 농림부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그러한 의도로 제정되었고, 조정 권한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있다고 특별법에 명시되었음에도 그와 별도로 다른 조정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 부처간의 이기주의적 관행 우려, 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대책 간의 얼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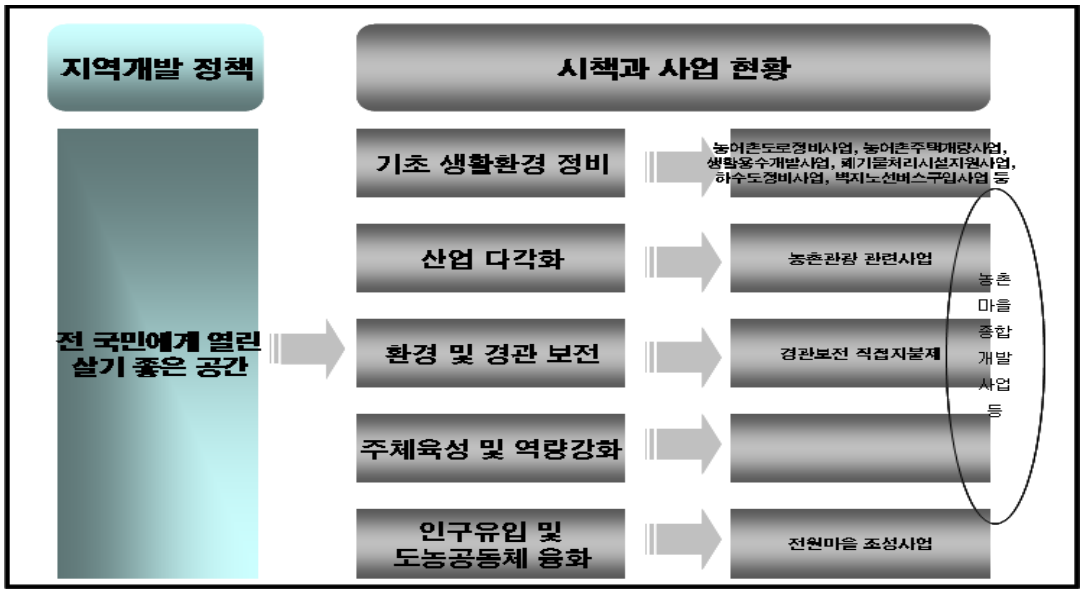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상호 보완적 접근의 영역이니만큼 정부의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농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농림부가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어떤 시책과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의 영역과 추진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예시

· 현재: 향토산업 / 복지 / 교육 / 지역개발 / 도시민 정주지원

· 변경: 기초 생활환경 정비 / 산업 다각화 / 환경 및 경관 보전 / 주체육성 및 역량 강화 / 인구 유입 및 도농공동체 융화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 도시의 경우는 특정 문제나 사안을 두고 주민들 주도로 사업을 벌이는 방식의 issue network에 의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촌의 경우는 자치단체와 리더의 동기부여에 의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의 policy network에 의해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지자체의 자구 노력은 불가피

- 지방 공무원의 역량 증대와 책임성 강화 중요

- 마을단위, 읍·면단위, 시·군단위 다양한 공간단위별 구상과 활동 실현 가능한 조건 형성

-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

- 주민참여의 제도화(일본의 지역가꾸기 조례 및 지원학)

※ 지원학 실천 과정의 예(2004년11월20일-21일/오가와무라)

- 사전준비 및 지원학 설명회: 지역주민 등 참가자들은 조사범위, 방법 등을 서로 상의하며 전문가로부터 지원학 설명

(지원학설명)

(조사범위확인)

(사전회의)

- 조사 실시: 그룹(7-8명 정도)별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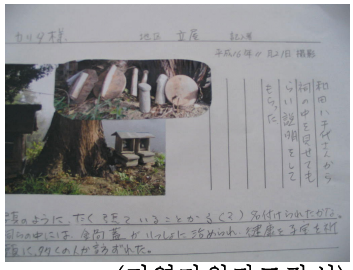
(조사개시)

(보물발견)

(환경점검)

- 조사결과 정리: 지역자원 카드, 지역자원 그림지도 등 작성

(조사자료정리)


(지역자원카드작성)

(정리작업)

- 발표 및 토론: 조사결과를 가지고 발표회, 토론회

(발표자료전시)

(발표-지역주민)

(토론)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참여 주체 양성

-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사람의 문제이다. 일단, 양적으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절대 부족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는데 참여할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

- 전문가 집단과 지방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다양한 분야의 도시에 거점을 둔 시민단체 등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일본의 NPO, 유럽 LEADER 프로그램의 Action Group, 영국의 Groundwork 등)

<참고> 일본의 NPO 활동

○ NPO(Non Profit Organization)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1999년 1,724개였던 일본의 NPO는 2006년 2월 현재 25,682개에 달한다.

○ NPO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익의 분배를 하는 기업적 조직은 아니지만 대표와 소수 정예의 스텝, 정회원, 자원봉사자 등 계층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대표와 스텝에게는 최소한의 보수가 주어진다.

○ NPO의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특정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도 주어진다. NPO의 활동 분야는 공익적 활동에 해당하는 17개 분야로서 주로 도농교류, 환경, 복지, 교육, 의료, 자원관리, 커뮤니티 비지니스 등 농촌에 절실한 일들을 포괄하고 있다.

○ NPO의 활동에 의한 가장 큰 효과는 NPO가 활동하는 농촌의 경우 도농교류를 통한 소득사업이 활성화되고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촌에 풍부한 자원을 매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활속의 도농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료: 송미령(2006c)

참 고 문 헌

강홍빈, 2004, “신개발주의 비판: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공간과 사회」 21.

김정섭, 2006, “경남 함양군 지역농업 혁신체계 분석”, 미발간 자료.

김현호, 2006,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김홍순, 2000, “근대화 프로젝트로서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pp.21-38.

성주인, 2006a, “민관협력의 지역경영 실험: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과 지역순환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변화를 보다」.

성주인, 2006b, “협동으로 가꾸는 건강한 지역사회: 안성의료생협의 보건의료활동과 지역 가꾸기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 변화를 보다」.

송미령 외,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 2006a,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 2006b, 「농촌의 변화를 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2005a, “기업이 나서는 농촌 가꾸기”, 농민신문 2005. 7. 11일자.

송미령, 2005b, “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정책의 방향 정립”, 새국토연구협의회 2005 제3차 포럼 자료집, pp.3-26.

송미령, 2006a,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제이플러스, pp.336-359.

송미령, 2006b, “새마을운동에서 ‘신활력사업’으로”, 국정브리핑 2006. 7. 31일자.

송미령, 2006c,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촌개발”, 농민신문 2006. 5. 18일자.

의료생협연대, 2005,「의료생협 입문: 의료생협 10년, 건강마을 만들기 성과와 전망」.

정기환, 2002,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방향”,「농정연구」2, pp.113-132.

정천섭, 2006,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농가부채 대응: 전국 장수군 농업경영회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농정연구」17, pp.183-202.

Kroes, Gunter, 2001, "Strategies for Rural Development in Europe",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 Strategy for Developing Rural Sustainability and Amenity 자료집.